

이슈브리프 820호  
(2026. 3.12)

## 2026년 중국 양회 평가 및 시사점

# 제820호

유현정 yhj@inss.re.kr



## 국문초록

2026년 중국 전국 양회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추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대만 문제 등 불확실한 전략 환경 속에서 경제 안정과 안보 강화를 정책의 핵심축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2026년 GDP 성장을 목표를 4.5~5%로 설정하며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5% 이하 성장 목표가 제시된 것으로 중국이 고속 성장 중심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을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미래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투자 중심 성장 구조와 낮은 가계 소비 비중으로 인해 내수 확대와 산업 현대화 간 균형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군사 측면에서는 군부 인사 정비와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력 집중과 군 통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대만 정책에서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만 주민에 대한 경제·사회적 유화 정책을 병행하는 화공(和攻) 전략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향후 △경제 안정 △기술 자립 △시진핑 주석의 권력강화 △대만 문제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시진핑 체제의 정책 일관성 강화, 대만 해협 긴장 고조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산업 정책 강화 등 측면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중국 양회(全国两会),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질적 성장 전환,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 대만 화공(和攻) 전략

중국은 3월 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양회는 중국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이하 '15·5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대만 리스크 등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대내외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내년에 개최될 제21차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양회는 중국 지도부에게 더욱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양회에서 리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의 발전 방향을 담은 '15·5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군부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면서 대표단들은 외부 언론과의 접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사뭇 침체된 분위기에서 양회일정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시진핑 집권 이후 가장 많은 대표(113명)가 불참하는 상황은 이러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양회 직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對이란 공습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동으로 집중되면서 중국 양회에 대한 주목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국가 발전 방향은 이번 양회의 주요 의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경제 성장 목표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 △고위급 인사 배치 △대만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정책 방향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숨 고르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리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26년 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약 5%'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며,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 목표가 5% 이하로 제시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약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 양회에서 성장 목표를 상향 조정한 지역이 장시성 한 곳에 그쳐 목표 하향은 예견된 조치로 평가된다.

성장 목표 조정은 중국 지도부가 '저성장'을 새로운 정상상태(新常態, New Normal)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속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부채 주도형 투자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 모델은 공급 과잉과 수요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완화된 성장 목표는 정책 당국이 단기적인 성장률 압박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과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여지를 제공한다. 리창 총리가 성장 목표 설정 과정에서 '구조 조정', '위험 예방', '개혁 추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질적 성장 중심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최된 '성급·부처급 간부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의 기술 혁신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복 투자'와 '과잉 생산'을 경계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관리의 업무평가 기준을 단순한 성장률 달성 여부보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산업 발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과잉 생산과 기업 간 소모적인 가격 경쟁, 이른바 '내권(內卷)'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다.

##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 내수 확대와 산업 현대화의 딜레마

이번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주도 발전과 내수 시장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15·5 계획 초안’에서도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고품질 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리창 총리는 미래 에너지, 양자 기술, 인공지능(人工智能,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G 등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제시하고 특히 ‘인공지능+’ 전략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AI 기술의 산업 적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와 오픈소스 협력 구상을 통해 국제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내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안정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 구조에서는 두 목표가 상호 제약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소비 촉진’과 ‘산업 시스템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였지만, 국민 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은 약 40%로 세계 평균인 5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지도부 역시 내수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 중심 성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한된 재정 자원이 기술 자립과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될 경우 가계 소득 확대와 소비 기반 강화는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시 주석의 중앙집권적 권력 강화를 위한 군 인사 조치

최근 중국 정치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4중전회에서는 ‘두 가지 확립(兩個確立)’을 강조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역할 확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군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한 군 인사 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2년간 해임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군 장성이었으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에 따르면,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100명 이상의 장군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군 지휘관의 약 5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번 양회 개막 전날 장군 9명을 포함한 19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해임되면서 군 인사 정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인 정원의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張升民) 부주석 중심의 제한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민해방군 대표 자격으로 군 업무보고를 발표한 장성민 부주석 역시 ‘두 가지 확립’과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의 철저한 관철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이 시 주석에게 더욱 집중되면서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 중심 체제’와 절대적

복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실전 경험을 보유한 전문 장성들이 인사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군사 준비 태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군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력과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 대만에 대한 화공(和攻) 양면 전략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통일 과업을 핵심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번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반영되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一個中國原則)’과 ‘1992년 합의(九二共識)’에 대한 기존 입장은 유지되었으나,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관찰된다. 첫째, 지난해 ‘대만 독립 분리주의에 단호히 반대(反對)한다’는 표현이 올해에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타격(打擊)한다’로 변경되면서 보다 공세적인 메시지가 강조되었다. 특히 ‘분리주의’에 ‘세력(勢力)’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구체적 개인 및 조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대만 내부의 독립 세력뿐 아니라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이나 일본의 안보 협력 등 외부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강대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강경 기조와 함께 ‘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정책’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화 정책 역시 병행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통제력과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화공(和攻) 병행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 양안 간 상호 불신, 지정학적 긴장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양안 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 요인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만 지방선거, 미국 중간선거, 중국 5중전회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양안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 및 시사점

올해 양회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종합하면, 2026년 중국은 경제 안정과 안보 강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율(4.0%),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4조4천억 위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0%), 실업률(5.5%)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GDP 성장 목표는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을 7.0%로 제시해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증가율이 여전히 GDP 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군 현대화와 지정학적 안보 대응이 여전히 핵심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다만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 확대, 기술 자립, 질적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은 몇 가지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성장 기반의 안정성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연평균 약 4.7~4.8%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문제이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및 국방 분야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 비축 관련 지출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일련의 조치로 인해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부터 저렴한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점은 적지않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적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 중국의 현상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할 경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 관리이다. 관세 갈등,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미중 관계의 안정 여부는 중국의 대외 환경 관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결정은 단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올해 중국의 대외환경 안정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년 중국의 정책 방향은 한국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시진핑 체제에서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대외 정책의 전략적 일관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상 간 교류 확대와 전략적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

둘째, 대만 문제를 둘러싼 수사적 변화는 향후 대만해협 정세가 더욱 긴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이자 레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주요 국제회의에서 관련 이슈가 제기될 경우 신중한 외교적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내수 확대와 기술 자립 중심의 산업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도 중국 시장의 구조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